

철도파업 해 넘기나… 산업계 피해 ‘눈덩이’

운행률 뚝… 시멘트업계 피해액 120억 달할듯

경찰 공권력 투입에 반발 ‘사회갈등’으로 번져

전국철도노조가 ‘수서 발(發) KTX 범인 설립’에 반발하며 시작된 철도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로 18일째 사상 최장기를 맞고 있으나 파업 열차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까지 진입하는 초강수를 두고 연행에 실패하면서 노동계 전체의 거센 반발만 불러 일으켰다.

민주노총은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물론 애당초 시민 사회단체까지 가세한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번지며 연말 정국을 어둡게 하고 있다.

◇수서 발 KTX 범인’ 설립이 파업

단초=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9일, 10일로 예정된 수서 발 KTX 운행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8일 코레일과 마지막 본교섭에 나섰지만 교섭이 중단되자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선언문에서 “선로를 바로잡고자 탈선을 눈앞에 두고 질주하는 열차를 잠시 멈추겠다”고 밝혔다.

노조 반대 속에 코레일은 파업 다음날인 1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 발 KTX 범인 설립·출자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현재까지 참가 노조원 7712명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또 노조 지휘부 191명을 고소·고발해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26명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철도운행률 ‘뚝’…국민 불편, 물류 운송 큰 타격=파업 3주째인 지난 23일부터 KTX 운행률이 73%까지 낮아지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평소의 56%, 61%만 각각 운행되는 등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6.1%로 떨어졌다. 코레일은 파업 4주째인 30일부터는 필수수지 수준으로만 열차 운행된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20%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내년 1월 6일 이후에는 필수 유지 대상이 아닌 화물열차는 운행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 미칠 여파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에 첫 공권력 투입…노동계 반발 확산=김명환 위원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된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를 검거해 조속히 파업을 종식하려던 정부와 경찰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초강수까지 뒀으나 1명도 연행하지 못하고 노동계 전체와 애권,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조례사서 3자 면담

철도노조파업 18일째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례사에서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왼쪽)과 회생위원회 도법 스님(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민주·진보·정의당 등 애권은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작전을 “불통정치의 극명한 사례”라고 일제히 규탄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에 대한 폭 압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노사정위 불참을 비롯한 정부와의 모든 대화 중단을 발표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서울 조례사에서 “종교계가 나서 중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철도파업 여파가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120억 피해…컨테이너는 트럭 확보 전쟁=철도 파업으로 산업계 각 분야에 차질이 빚어지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철도 파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철도에 대한 의존 비율이 가장 높은 시멘트업계다. 한국시멘트협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아베, 야스쿠니 참배 강행…한·일관계 최악

고이즈미 이후 7년만

중국정부도 강력 반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8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아침 일찍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 일본에 이 사태가 불고 올릴 관계에 악영향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역사정의와 인류양식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행위로 강력한 분노를 표시한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와 관련, 청웅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오후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을 직접 만나 항의했다.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강행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안 그래도 역사 문제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국, 중국에

대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후 기자들에게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중(尊崇)의 뜻을 표했다”면서 “중국, 한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 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정권의 1년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늘을 택했다”면서 한국, 중국 정상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차 아베내각(2006년 9월 ~ 2007년 9월) 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을 “통한”이라고 밝혀 왔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국, 중국에 대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을 직접 만나 항의했다.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강행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안 그래도 역사 문제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국, 중국에

수완지구 수익성상가(매매·임대)

수완지구 상가 임대

★1층 상가매매 17.5평 매가3억5천★

대방5차 APT후문 코너

★3층 상가 매매 85평 매가 3억3천★

모아APT 후문 보증금 3천 월 200만 원 2억5

★3층 상가매매 62평 매가 2억6천★

세계로 병원 대로변 보3천 월160만

★수완지구 1층 (18평)★

보3천, 월 130만 (의류, 부동산 네일, 회장품, 적합)

★3층 상가(62평)★

보3천, 월 160만 (학원, 병원, 사무실, 매매가능)

쌍촌동 원룸 빌라

(APT소형)매매

▶11평형 매가 3200만

▶12평형 매가 3300만

▶15평형(투룸) 매가 4000만

주) 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정통,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재(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자산동 2지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찰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천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
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

“민영화 방지 법개정 FTA 위반”

“대체 인력 모집, 사태 해결못해”

여야 ‘철도파업’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철도파업 사태의 해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철도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원포인트 법 개정은 이미 드러난 것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고 삼권분립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철도노조 요구에 대해 잘못된 내용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우 의원은 “FTA에 위반되는 정부 논리는 사실과 다르고 민영화하면 철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장관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며 “소위원회 구성이나 (민영화 금지의) 법적 명문화를 통해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철도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한마디로 유구무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국토

부가 이 문제를 대단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영화 방지是为了 위한 많은 장치가 FTA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효과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했다”면서 “대체 인력 모집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전형적인 차세대 변화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